독일의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전 경 숙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Ⅰ. 서언

독일의 대학은 1968년 학생운동 이후부터 전통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운영의 합리적 절차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대학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부딪히고 있다. 학생 수는 늘어났지만 시설 및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위기라고 일컬어 질 만큼 대학 사회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독일의 대학제도는 공교육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자격시험(Abitur) 합격자의 비율이 한 학년당 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3%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28개 산업국가 중 23위로 떨어졌다. 독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통독 후 2003년까지 늘어나던 대학생 수도 등록금제도의 도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사과정이 일반화되지 않아 대다수의 대학이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며, 학점을 관리하며 학위를 마치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독일 대학의 시스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현실에 직면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교육의 위기를 맞아 최근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개혁을 위한 시도들을 고찰하고, 특히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대학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정적 투자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1].

1) 본 고는 독일대학정보지 Hochschul-Informations System GmbH가 발간하는 『HIS』 중 'Aktuelles' (http://www.his.de/New, 2005. 6. 23) 및 http://www.bildungsserver.de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다.

"

독일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19억 유로를 대학의 우수연구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장기간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는 우수두뇌 및 연구진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를 획득하는 데 주목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연구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대학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능력을 확립하고 신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Ⅱ. 대학개혁을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

1. 대학의 자율화 증진

독일 대학제도는 철저한 공교육 중심으로 관료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독일의 연방정부는 고등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대학의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열어 놓았다. 독일에서 고등교육분야의 법적 권한은 연방과 지방자치로 나누어져 있다. 대학의 실제적 운영과 관련한 책임은 주로 지방자치에 있고, 연방정부는 '고등교육일반법(HRG : Hochschulrahmengesetz)'의 범주 내에서 고등교육 체제에 관한 일반 법률과 규정을 정하는 권한을 지닌다. 독일의 16개 지방은 각자 차별화된 고등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8년 8월 고등교육일반법은 대학의 세계화, 국제화 및 경쟁력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힘입어 대학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특성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정되었으며, 2002년 또 한번 중요한 개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에 학사 및 석사과정이 새롭게 도입되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대학교육 과정이 생겨났으며, 교수진에 있어 '조교수제'를 두어 대학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후임학자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2005년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등록금제도를 부활하여 조만간 여러 연방에서 등록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2. 다양한 학위제도 도입

지난 몇 년간 독일의 대학은 역동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위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학업 내용의 개혁과 새로운 대학졸업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많은 대학들이 이미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며, 졸업 후의 진로와 취업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적절한 방향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화가 없는 새로운 학위제도의 도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미 경제계에서도 독일 대학의 학사 및 석사학위의 졸업제도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듯이, 현재의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새롭게 도입된 학사 및 석사 과정 학위제도가 독일에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학자금 지원 강화

대학의 등록금제도 도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 연방교육장려법에 의한 장학금(보조금과 대여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독일 대학생들에게 있어 학업의 경제적 기반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 후, 진학을 위한 경제적 지원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여기에 국가로부터의 대여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대여 장학금은 학업을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논문을 써서 학업을 마칠 수 있는 시점까지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여 장학금은 독일 학생들이 학업을 시작하여 전문적 지식과 교육을 획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교육 기간이 장기화되고, 대학 졸업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학자금 지원의 강화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4. 대학의 교수 인력구조 개선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있는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젊은 학자들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조교수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연구지향적인 인력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수한 젊은 학자들이 대학 교수직에 남아 활발한 연구활동과 후진 양성에 매진하도록 하였다.

독일에서는 젊은 학자들이 교수가 되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박사과정 후에 주어지는 교수자격연구과정(Habilitation)을 마친 사람의 평균 나이는 40세가 넘는다. 이처럼 길고 힘든 교수자격연구과정은 대학 교수직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유능한 젊은 학자들이 대학 교수직을 회피하고 경제계나 외국 대학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는 곧 대학의 연구능력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젊은 학자들을 교수진에 영입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서 대학의 엄격한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대학의 창조성과 경쟁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Ⅲ. 대학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

최근 독일 정부의 대학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덕택으로 교수와 학생 및 연구자는 이전보다 더 역동적이고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에 있어서는 어떤 한계나 경계도 없어졌으며 국제화로 인해 대학의 발전과 근대화에 선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은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명석한 두뇌를 지닌 자를 보호할 의무도 지닌다. 1999년 독일은 볼로냐에서 이웃인 몇몇 유럽 국가들과 함

〈표 1〉 독일 정부의 우수연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지원 규모	기대효과	협력 기관
대학원	• 평균 100만 유로(약 13억 원) • 20% 프로그램 비용 추가 • 40개 사업까지 지원	학문 발전 및 우수한 후계자 양성	• 독일 연구공동체 (DFG :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 과학위원회 (Wissenschaftsrat)
교수 및 우수연구자	• 평균 650만 유로(약 84억 5000만 원) • 20% 프로그램 비용 추가 • 30개 사업까지 지원	젊고 유능한 교수 및 연구자 발굴	
우수연구	• 평균 2,100만 유로(약 273억 원) • 20% 프로그램 비용 추가 • 총 21,000만 유로(약 2,730억 원)까지 지원	젊고 유능한 교수 및 연구자 발굴	

* 출처 : Hochschul-Informations System, http://www.his.de/News(2005. 6. 23)

께 2010년까지 유럽연합 대학을 만들기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독일에서 최근 가장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대학개혁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05년 6월 연방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연방 수상 및 지방자치 단체장은 최근 체결한 공동협약에 따라 독일 대학의 학문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우수두뇌그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대학 외부의 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수두뇌그룹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진행사항은 연방 및 지방정부의 위원회가 맡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의 중점 추진사업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우수연구 지원 사업 개요

독일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19억 유로(약 2조 4700억 원)를 대학의 우수연구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중 75%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지방정부의 몫이다. 본 사업은 독일 연구공동체(DFG :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와 과학위원회(Wissenschaftsrat)의 협력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장기간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는 우수두뇌 및 연구진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를 획득하는 데 주목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연구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대학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능력을 확립하고 신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 사업은 우수연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① 학문의 후계자 양성을 위한 대학원 지원 : 평균 100만 유로(약 13억 원), 20% 프로그램 비용 추가, 40개 사업까지 지원
② 우수연구 장려를 위한 우수두뇌그룹 지원 : 평균 650만 유로(약 84억 5000만 원), 20% 프로그램 비용 추가, 30개 사업까지 지원
③ 대학의 우수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미래 역점 사업 지원 : 평균 2,100만 유로(약 273억 원), 총 21,000만 유로(약 2,730억 원)까지 지원, 20% 프로그램 비용 추가

독일의 연방 및 지방정부의 공동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인 헬름홀즈 협회(Helmholtz-Gemeinschaft), 막스 플랑크 협의회(Max-Planck Gesellschaft), 푸라우엔호퍼 협의회(Frauenhofer Gesellschaft), 라이프니쯔 협회(Leibniz-Gemeinschaft) 및 독일 연구공동체가 연구지원 기관으로 결정된 연구지원 협약에 따르면 연방 및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필요불급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장려하기로 계획된 시설 및 기관에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보장하며, 2010년까지 매년 3%씩 지원을 증가한다.
- 연구개발을 위한 전제 조건을 개선한다. 대신, 연구기관 및 시설은 연구개발 능력을 신장하고 연구의 질, 효용성 및 연구성과를 높일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 경쟁 상대의 약점과 강점을 진단하고(벤치마킹)
- 기대효과가 큰 새로운 연구분야를 전략적으로 모색하여 계획을 세우며(통찰력)
- 경제와 연구협의체 및 협력단체를 형성하고(산학 협력체)
- 박사 후 과정 및 학문 후계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 학문과 연구에 있어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문 분야의 지도급 위치에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지원의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대효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의 주체인 연방 및 지방정부와 재정지원의 수혜자인 대학 및 연구기관이 상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 우수연구 지원 사업 사례

한 사회의 혁신적 힘은 우수 두뇌와 최상의 아이디어, 경제적 투자 및 시장성을 지닌 생산품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경제성장과 장래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및 복지 등이 이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미래의 기회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란, 연구의 무한한 잠재력을 잘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연방과 지방정부는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2010년까지 매년 3%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연구기관은 이러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토대로 하여 연구능력을 신장하고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학문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다. 각 연

구기관은 질적으로 우수한 후계자의 지속적인 경력 연마를 보장하고 연구학문분야에서 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발하고 다소 위험성이 있고 비 일반적인 연구 분야에 대한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우수연구 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와 여성연구협회의 사업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정보시스템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막스 플랑크(Max-Planck) 연구협회 지원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고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는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고 학문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전략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는 연구의 목적 설정과 연구 분야 개발에 있어 국제 경쟁의 상황을 고려하고, 훌륭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앤다. 다른 기관, 특히 대학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있고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연구에 대하여도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는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장려해 나갈 것이다.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는 연구협회와 대학 및 대학 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후계자 양성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막스 플랑크 연구학교와 대학원의 협력 관계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 안에 있는 혹은 대학과 공동 협력하고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인력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와 대학의 연구인력이 더 긴밀한 협력 체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더욱이 생명과학, 물리, 정보학 등의 전문 분야와 기계 관련 학문 분야에서 여성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여성연구협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지원은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가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로써 여성 과학자의 참여는 지난 7년간 약 10%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연구인력의 약 1/4이 여성 연구자임을 의미한다.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는 질적으로 우수한 여성 연구인력의 수를 늘리고, 여성 연구책임의 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올려놓을 계획이다.

한편, 탁월한 능력을 지닌 후임 학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펼치게 하기 위하여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는 내년부터 독자적인 후임 학자들의 수를 양적으로 한층 늘릴 계획이며, 국제 막스 플랑크 연구학교의 수도 확대할 것이다.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는 탁월한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업적은 매 2년마다 주로 국제적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문적 조언을 얻게 된다. 6년 주기로 전 연구소를 망라한 평가가 전 연구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예측과 전망이 가능하다. 다양한 평가영역에서 국제적 수준을 갖춘 평가척도가 사용되며, 이는 국내 혹은 국제 경쟁자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2) 여성연구협회 지원

푸라우엔호퍼 협회(FhG:Frauenhofer Gesell-schaft 이하 여성연구협회)가 EU로부터 지원되고 있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유럽에서 여성연구협회의 연구입지를 확실하게 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U 사업 지원에서 여성연구협회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연구 제안도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안된 사업의 23%는 나노 테크놀로지, 25%는 정보통신 분야에 지원되고 있으므로 여성연구협회의 성공률은 EU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여성연구협회는 유럽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U 지원의 확보율을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성연구협회는 대학과 대학 외부의 연구기관 및 산업 분야 등 상이한 분야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각기 다른 강점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상호 의견 교환 과정을 통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새로운 연구 분야 개발에 주력한다.

여성연구협회는 연구결과를 혁신적 생산품에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습분야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적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이다. 한편, 여성연구협회는 그들의 연구업적을 국제경쟁에 제공하고 있다. 시장과 외부 테크놀로지 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받으며, 내부 위원회를 통하여도 평가된다.

또한, 여성연구협회는 후임 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재능과 소질을 지닌 중고생들을 위하여 방학 동안 개설하고 있는 'Frauenhofer Talent'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학문에 대한 관심을 조기에 형성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지원, 특히 책임자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여성 지원은 여성연구협회의 기업전략에 잘 드러나 있다. 과학 분야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이며, 이는 과학 및 기술 관련 학과 졸업생 비율을 넘어서고 있다. 여성연구협회는 여성 과학자 및 여성 책임인력 부분에서 여성의 비율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3) 대학정보시스템(HIS : Hochschul-Information System) 지원

국가, 사회, 문화 및 경제의 경쟁력이 세계화되고 유럽 교육공동체가 형상되면서 교육 및 고등교육체제의 국제비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변화 및 개혁의 모델이나 실제적인 현실화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눈여겨보게 된다. 그러므로 EU나 OECD 혹은 UNESCO와 같은 국제기관의 국제비교연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그러한 연구들은 항상 주목을 받게 된다.

대학정보시스템은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아이템과 방법론 개발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HIS는 매년 'Education at a Glance'(EAG)로 출간되고 있는 OECD의 교육지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EAG의 독일어 판인 'Bildung auf einen Blick-2004' 사업을 진행시켰다. 2003년에는 '유럽연합국가의 대학생들에 관한 기초자료 모음'(EUROSTUD 2003/2004)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이 사업은 HIS의 기획하에 11개의 유럽국가가 함께

“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 등 현재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온 대학개혁을 위한 시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대안들은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참여하였다. EUROSTUD의 제2판은 2005년에 출간될 예정이다.

대학정보시스템은 또한 2001년부터 독일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보고하고 있는 'Wissenschaft weltoffen'(학문의 세계화)을 출간하고 있다. 2004년에 이미 제4판을 출판하였고, 2005년의 5판 출간을 위한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독일 통계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외국에서 유학하는 독일 대학생, 독일에서 유학하는 외국 대학생, 학생과 과학자들의 이동성에 관한 국제비교' 등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였다.

독일 고등교육체제 및 고등교육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유럽화 및 국제화의 맥락에서 대학정보시스템은 국제적 활동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Ⅳ.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독일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추진하고 있는 대학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막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방향 및 그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시설 및 재정 부족, 대학 입학자와 졸업생 수의 감소,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학위제도의 운영 및 긴 학업기간, 대학 교수진과 연구진 양성 체계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연구자 및 연구 성과의 부진 등 심각한 대학 위기에 처하여 정부가 주관해 온 여러 가지 대안적 모색은 개혁적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대학의 우수연구 사업에 지원키로 한 19억 유로, 한화로 약 2조 4,700억 원이란 커다란 재정지원 계획에서 대학개혁을 위한 독일 정부의 집약된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연구인력 및 연구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적 투자를 매년 3%씩 늘리기로 한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독일은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전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역시 상당히 효율적이다. 독일

연구공동체와 과학위원회를 주축으로 산하 각 연구기관 및 대학과 공동협력체제를 갖추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와 재정지원의 수혜자인 대학 및 연구기관이 상호간에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다. 재정지원의 주체는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을 개선할 의무를 지니며, 재정지원의 수혜자는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각 연구기관들은 벤치마킹 및 산학협력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며, 우수한 연구업적을 거두기 위하여 국제적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된 연구평가 시스템을 활발히 가동시키고 있다.

독일과 유사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도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대학개혁을 위한 효율적 대안 모색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있어 상호 모순과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지방 사립대학의 육성을 위하여 누리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대학의 통폐합이 강구되기도 한다. 정부의 허가로 설립된 대학이 10여년 만에 통폐합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 등 현재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온 대학개혁을 위한 시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대안들은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독일의 사례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학개혁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